중앙위원 120명 새얼굴…대폭 세대교체

中전대 폐막, 상무위원 4명 바꿔
서열 5위 쩡칭훙 부주석 등 탈락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2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당 중앙위원회 위원(204명) 등을 선출한 뒤 공식 폐막했다.

17전대는 이날 중앙위 위원(204명)과 후보위원(167명), 중앙기율검사위 위원(127명)과 후보위원 선출을 확정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정치보고서,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삽입된 당장(黨章)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1주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폐막식을 주재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이날 중앙위 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127명과 후보위원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출된 중앙위원 명단에 권력서열 5위의 쩡칭훙(曾慶紅·68) 국가 부주석을 비롯해 7위인 우관정(吳官正·69)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9위인 뤄간(羅幹·72) 당 중앙정법위 서기 등 3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빠졌다.

이로써 지난 6월 사망한 황쥐(黃菊) 부총리의 빈자리까지 합쳐 최소한 4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교체되게 됐다.

또 우이(吳儀)·정페이옌(曾培炎) 부총리,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장리창(張立昌) 동북진흥 영도소조 부조장 등도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누락되고 중앙위원에 120명의 새 인물이 올라 대폭적인 세대 교체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폐막식에서 2천235명의 대표 및 특별대표는 221명의 중앙위원 후보 중 204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으며 득표율이 떨어지는 17명의 후보들은 탈락했다.

이에 따라 당선자보다 후보자가 많은 일종의 경쟁 선거 방식인 차액(差額) 선거의 비율은 과거의 5%보다 3% 포인트 이상 늘어난 8.3%가 됐다.

이날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17전대 폐막 다음날인 22일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고 정치국 상무위원(현재 정원 9명)과 정치국원(24명)을 선출한다.

홍콩 언론들은 새로 선출될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후 주석 이후의 차세대 후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상하이시 서기, 리커창(李克强) 랴오닝성 서기와 함께 허궈창(賀國强) 당 중앙조직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이 유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후진타오(맨앞줄 왼쪽) 주석과 장쩌민(맨앞줄 가운데) 전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파키스탄 폭탄테러 배후 탈레반이냐 정부냐

지지도 상승 노린 부토측 '자작극' 가능성도

136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키스탄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20일 용의자의 사진만 공개했을 뿐 그 배후가 누구인 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만 부토의 귀국 전후로 테러 경고가 잇따랐던 만큼 현재로서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의 국제 테러조직이 가장 유력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앞서 탈레반 사령관인 바이툴라 메수드는 파키스탄 언론에 "우리 테러리스트가 부토의 귀국을 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사건 당일 또 다른 탈레반 사령관 하지 오마르는 로이터에 "무샤라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토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테러하면 의례 떠올리게 되는 악명높은 국제 테러단체 외에도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배후 추정세력은 다양하다.

우선 부토의 귀국을 달갑지 않게 여긴 정부내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시 카라치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터미널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경비가 허술했고, 부토의 카라치 시내 이동 경로가 사전에 유출될 정도로 보안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이런 정황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폭탄테러가 대중적 지지도 상승을 노린 부토 측의 '자작극'일 지도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파키스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지지자들이 20일 하이더라바드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부토를 겨냥한 자살 폭탄테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시리아 핵시설 北 지원 설계

이스라엘 공습 직전 사진 촬영 확인

이스라엘은 지난달 시리아 핵 의혹 시설 공습 당시 첩보위성 사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스파이가 시설에 잠입해 촬영한 사진을 확보한 뒤 북한과 연계된 핵원자로 시설이라는 확신을 갖고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BC가 19일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시리아 핵 의혹 시설물 사진들을 보여주고 공습을 제안했지만 미국 정부와 백악관은 핵시설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습에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BC는 이스라엘이 지난 여름 시리아 핵 의혹 시설을 처음 발견하고 모사드에서 직원을 가장한 스파이를 잠입시켜 세부 시설물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들이 시리아의 핵시설물 건설과정에서 북한의 기술적, 인적 지원 및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北 최태복 인민회의 의장
핵협력 의혹속 시리아 방문

미국 언론이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협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시리아를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은 최 의장이 20일 다마스쿠스에서 모함마드 사이드 브카이탄 바스당 서기보를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과 중동 및 한반도 상황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골란고원에 대한 시리아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북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자이툰부대 절반 줄이고 1년 더

정부 '600명 규모 내년 말까지 주둔' 최종 확인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를 내년 말에 철군하고 병력을 600여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정부는 자이툰부대의 철군시기를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말로 조정하되 병력규모를 600여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임무종결계획서에 담아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이란 표현 대신 '철군시기 조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작년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때 임무종결 시점을 올해 말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내년 말 무조건 철군**=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철군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한 것은 내년 12월까지 무조건 철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이툰부대의 철군시기를 내년 말로 못 박은 것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관련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청와대 일각에서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을 강하게 주장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내년 말 철군키로 결론을 내린 것은 미국 등 동맹국 관계를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능력과 평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 '계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을 뿌리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병력 600여명으로 줄여**=현재 1천200여명인 병력규모를 600여명으로 줄이는 것과 관련, 군당국과 청와대 등 관련부처 내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900여명 이하로는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고 청와대 등에서는 6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력을 절반가량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자이툰 파병이 경제적인 실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3천200여 건의 이라크 재건공사 가운데 한국이 수주한 것이 한 건도 없으며 자이툰 주둔지인 아르빌의 공군기지 포장공사조차 터키가 수주하는 등 파병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프랑스 국민 10명중 9명
"대통령 이혼은 개인 문제"

프랑스인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세실리아 여사의 이혼을 대통령 부부의 개인 문제로 보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자 일요신문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가 여론조사기관인 이폽(IFOP)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이혼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개인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이혼이 사르코지 대통령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11%의 응답자만이 대통령의 개인 사생활도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리=연합뉴스